재보선에 사활 건 정세균-정몽준

결과 따라 향후 리더십·대권가도 큰 영향
정세균 "3곳 이상 승리 목표" 역량 총동원
정몽준 당 대표 입지 가늠 첫 시험대 '올인'

10·28 재보궐 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보궐 선거 결과는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대표와 정몽준 대표는 5곳의 재·보궐 선거구 가운데 최소한 3곳 이상은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 아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의 정범구 후보와 경남 양산의 송인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각각 참석, 필승의지를 다졌다. 또한, 11일에는 수원 장안의 이찬열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정 대표 측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5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2곳 가운데 1곳과 충북에서 승리할 경우,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2곳에서 승리하거나 충북과, 수도권 1곳, 경남 양산 등 3곳에서 승리한다면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권가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서 전패(全敗)를 하거나 충북에서만 승리한다면 '책임론' 확산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터져 나오는 등 입지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 대표 측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정면 돌파,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도 빠지며 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 대표 측에서는 최근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 아래 재보궐 선거 대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이번 재보선을 준비하는 자세가 남다르다. 이번 재보선이 한나라당 대표로서 첫 시험대인데다 차기 대권 도전 가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 대표는 지난 주 경남 양산 박희태 대표와 강원 강릉 권선동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달아 참석한데 이어 11일에는 수원 장앙과 안산 상록을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재보선이 열리는 5개 선거구를 돌며 본격적인 선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란 네거티브 전략에 맞서 '지역발전론' '인물론'으로 차별화하고, 대신 현장 위주로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11일 수원 장안구에서 열린 박찬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박 후보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10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서 열린 정범구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정 대표가 재보선에 '몰입'하는 것은 이번 재보선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게 될 첫 관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대표는 매일 재보선 선거구 5곳의 일일동향을 보고받고 지역 여론조사 자료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는 등 재보선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정치적 미래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양 당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선은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정치 싸움판 된 국감

박 지 경
서울취재팀 차장

지난주(5~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이 거듭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운찬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하지만 교과위의 증인 채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의원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었다. 교과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을 묻기 위해 경기도의회 김대원 의원(한나라당)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방의원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국감 사상 최초다.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문수 도지사를 국감 증인대에 세우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에 무산되자 도 집행부안을 의결한 도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경기도와 도의원들을 겨냥한 것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 도집행부와 도의회가 지난 7월 김 교육감 공약 사업인 소규모 초등학교 일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최근에는 도교육청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교육국을 설치하는 등 김 교육감을 압박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에 김대원 경기도의원 등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폭력"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원 증인 채택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도의원 국감 증인 채택은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당장 증인 채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결의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김문수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세지자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도의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물론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는 국회에 대한 협박이자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역사상 악선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국감도 무력화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과 이념이 다르다고 도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의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경기도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을 국정감사의증인으로 부른 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로 국회의 '격'을 낮추는 행위라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

/jkpark@kwangju.co.kr

"국내정치 전혀 관심 없다"

반기문총장 '차기 대선 출마설' 선 그어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대선출마설과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다. 반 총장은 지난 9일 저녁 뉴욕을 방문중인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위원 8명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국내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대선에) 출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발 더 이상 정치권과 관련해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전했다.

사실 반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오래 전에 정해져 있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반 총장은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인들의 몫이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 직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은 "한달 전쯤 워싱턴에서 반 총장을 만났는데 대선출마설에 대해 무척 곤혹스러워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한바 있다.

반 총장의 한 측근은 "대선 출마를 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느냐"며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모두를 당황케 한 이상한 노벨상"

오바마 '노벨평화상' 미국 내 논란 확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건강보험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첨예한 이슈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더욱 갈라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오바마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 언론까지 이번 수상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점과 의구심을 제기하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를 지지했던 워싱턴포스트는 10일 사설을 통해 "모두를 당황케 만든 이상한 노벨평화상"이라면서 "이 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본 뒤 수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과도한 칭찬은 환영을 받지 못하거나 난처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전임자보다 그를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가 취임 후 곧바로 왜 평화상을 받을 만한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타임스는 "노벨위원회는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벨평화상 자체의 신뢰를 깎았다"고 주장했다.

진보-보수진영 간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존 볼턴은 "노벨위원회가 미국인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오바마)는 상을 거부하고 3~4년 뒤에나 다시 (시상을) 검토해 줄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오바마에 '노벨 평화상' 축하 서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축하 서신을 보냈다고 김대중평화센터측이 11일 전했다.

이 이사장은 10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빛나는 관용과 화해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염원인 핵무기 없는 세상, 전쟁의 비극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평화를 향한 이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하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